

“국민의당 전 당원 투표, 위법 아냐”

법원, 반대파 가져분신청 기각... “규제 신중해야... 반대 다수로 나와도 사임 법적 의무 없어”

법원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와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중지해달라는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측 가져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수석부장판사 김도형)는 27일 통합 반대 측이 낸 전 당원 투표 금지 가져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 당원들의 모임 ‘나쁜선거거부운동본부(본부)’는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에 전 당원 투표를 중지하고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개표하거나 투표 결과를 공표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져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정치적 의견이나 견해의 형성 등에 관한 부분은 정당의 정치적 활동에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이에 대한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합당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전당원투표가 당헌에 반한다는 본부 측의 주장에 대해 “투표가 바른정당과의 합당 등에 관한 일정한 법적 효력의 발생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을 전당대회 의 전속적 권한으로 정한 당헌에 반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당규상 근거없이 실시돼 위법이라는 주장에도 “당무위는 당헌에 따라 직접 의결해 전당원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투표의 실시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당무위가 직권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당원 투표인 점, 투표 결과에 따라 당의 중요 정책이나 사안을 결정할 책무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유효투표 정족수를 정한 당규가 이 투표에도 반드시 적용되는 것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결과 발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외교부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결과에 대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투표 결과 안철수 대표에 대한 재신임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안 대표에게 직을 사임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결과 여하에 따라 안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임한다 하더라도 이 투표에 따라 당원들의 당대표 선출권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민의당 선거관리 위원회는 이날부터 진행 중인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과 관련한 안 대표 재신임 전 당원 투표를 나흘간 진행한 뒤 31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뉴시스

이재용 2심도 징역 12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특검)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도 열린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반성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면서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삼성 주주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먼저 깊이 반성하고 엄숙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2심 구형의견 역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박 특검이 직접 나와 전했다.

특검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특검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이 부회장 측은 전면 무죄를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과 달리 공여액이 가장 큰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220억2800만원 부분은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에 따른 삼성전자 자금 횡령 혐의, 최씨 소유 페이퍼컴퍼니인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고 돈을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최씨에게 제공한 말을 삼성전자 소유인 것처럼 꾸미는 등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도 있다. /뉴시스

“다스 실제 주인, 수사 과정에서 자연히 드러날 것”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실소유주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소유 관계는)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취재진에게 이 같이 말했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내 다스 비자금 수사팀 두 곳에서 두 트랙(two-track)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제간의 관심이 높은 다스 실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문제는 그 자체로 범죄사실을 구성한다기보다는 범죄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도 있는 문제”라며 “범죄 혐의의 동기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국민의당 여성위, 지역 이슈 발굴 경진대회 ‘대상’

국민의당 전북도당 여성위원회가 중앙당 전국여성위원회에서 개최한 ‘지역 이슈 발굴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26일 국회도서관 지하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시·도당 여성위원회가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전국여성위원회는 그동안 각 지역 여성 리더 및 핵심관계자들과 함께 여성생활정치 실현을 위해 지역현안을 발굴하는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박주현 전국여성위원장은 “여성이 일과 가정의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며 삶의 질이 향상되고, 정치 참여의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는 전국 여성위원회의 활동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우리 앞에 산적한 이슈를 함께 공감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여성 생활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文대통령 “국가 100년 중장기 교육비전 마련할 때”

“교육개혁 성공, 국민공감대 얻어야... 대입제도, 학생·학부모 입장에서 공정·단순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가의 100년 개혁을 염두에 두는 중장기 교육 비전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교육회의 위원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나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외적인 환경, 또 우리 국민의 수준 높은 역량과 에너지, 교육개혁에 대한 강력한 요구 등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중장기 교육비전을 마련하는 것도 시대적 요구”라며 “지난 20여년간 우리 교육은 김영삼 정부 당시 발표했던 531 교육개혁안의 흐름을 유지하

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시에 생각할 수 없었던 사회적 변화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은 국민 개개인이나 한 가정의 입장에서 내 아이를 키우는 문제이고, 사회나 국가차원에서는 미래의 시민, 국가의 인재를 키우는 일”이라며 “그래서 교육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이고, 국가적으로도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한 국정운영 철학으로 삼고 있는데 교육정책은 특히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충분히

히 수렴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은 온 국민이 당사자이고 또 전문가이며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가장 엮이는 분야가 교육이기도 하다”면서 “그런 까닭에 교육개혁의 성공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학부모·교사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데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 내용에 대한 공감과 함께 정책의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교육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며 “국가교육회의가 교육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모으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교육회의가 풀어야 할 대표 과제 중 하나로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들면서 “대입 제도는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프리라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대입제도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무엇보다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이 더 이상 격정과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은 행복하고 교사들은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또 학부모는 안심이 되도록 우리 교육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국가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뉴시스